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죽음 부른 위험의 외주화... “국회는 응답하라”

공공운수노조 | 승인 2025.06.08 17:20

故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7일차.. 8일, 우원식 국회의장 고인의 빈소 및 사고현장 찾아
6년 전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여전히 이행 안 돼
故 김충현 대책위, 당정 및 대책위 논의기구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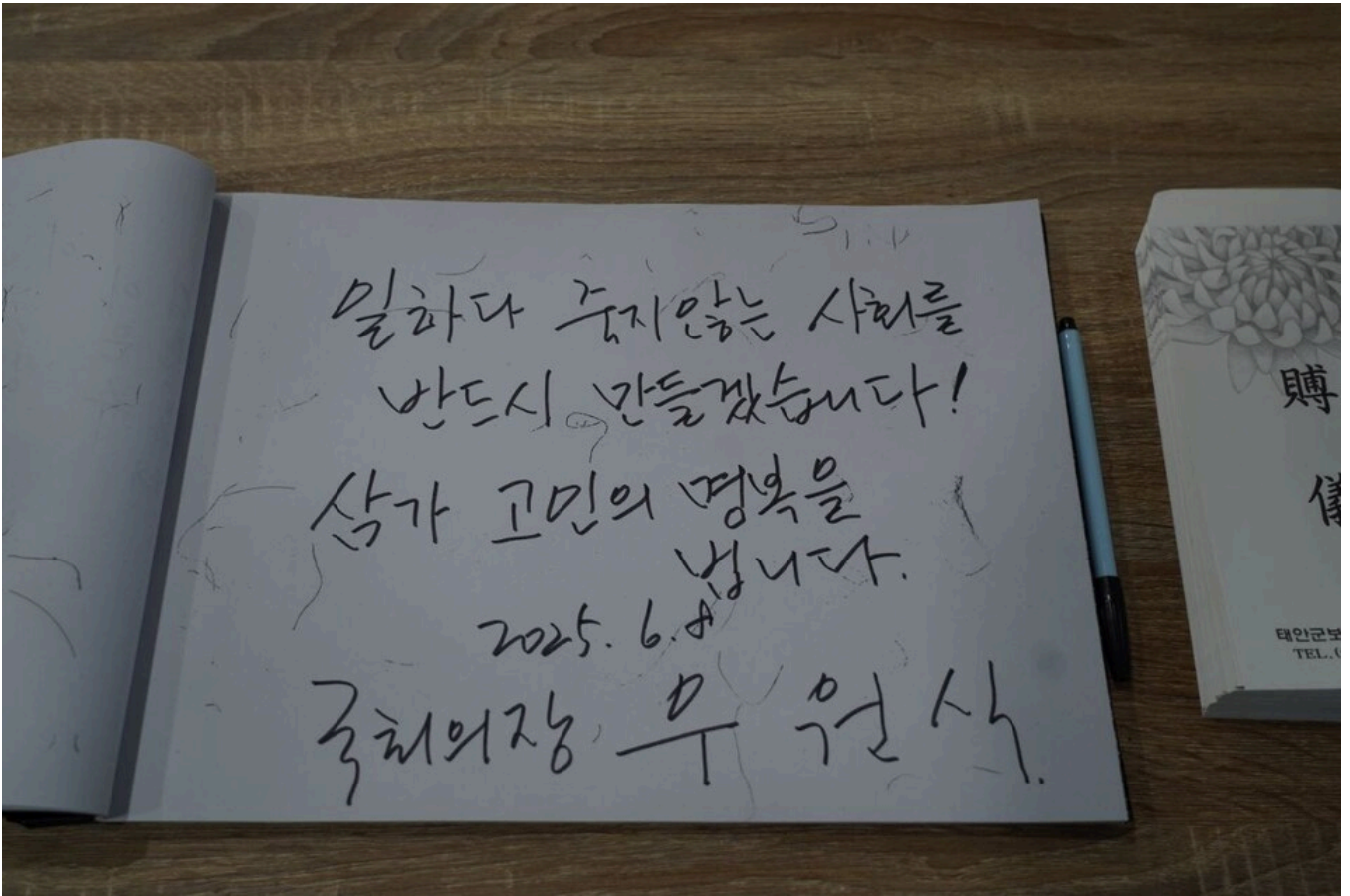
8일 태안, 故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빈소에서 손을 맞잡은 (좌)우원식 국회의장과 (우)고인의 동료인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의 모습

8일 정오,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분향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문했다.

지난 2일 14시 28분경, 故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가 태안화력발전소 내 기계공작실에서 범용선반 작업을 하던 중 사망사고를 당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선반의 회전부에는 방호덮개 또는 방호울을 설치해야 하지만, 사고 선반에는 비산되는 칩을 막는 덮개만 있었고, 말림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덮개가 없었다. 현재 원청(한전KPS)은 작업오더가 없는 임의작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사결과 작업의뢰서 발행, 하청업체의 작업승인 등 정상적인 작업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긴급/돌발 작업 시에만 허용되는 구두 요청 방식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8일 정오경, 우원식 국회의장이 분향소에 도착하여 故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분향소에 헌화하고 빈소를 지키고있는 유족에게 위로인사를 건넸다. 이후 분향소에서 최진일 대책위 상황실장의 사고경위 브리핑을 진행하고,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의 사회로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국회의장간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현장에는 유족,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임원사무처 등이 동석했다.



8일 태안, 故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빈소를 찾은 우원석 국회의장의 추모 묵념 및 방명록 모습



8일 태안, 故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빈소에서 최진일 대책위 상형실장이 사고경위를 브리핑 중인 모습





8일 태안, 故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빈소에서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 및 임원사무처 및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우원식 국회의장간의 간담회 모습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발전사에서 사고로 사망한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진상규명을 위해 투쟁해왔다. 그러나, 6년 전 지난 김용균 특조위(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 약속이 지켜졌다면 지금의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난 6일 대통령실 앞에서 비서실장이 접수한 요구단 답변 및 김용균 특조위처럼 이번 사망사고 역시 유족과 대책위가 포

함된 당정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동석한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지난 김용균 특조위때, 의장님께 노동자가 죽지 않는 사회 만들어달란 이야기를 드렸다. 그리고 7년 뒤 또다른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음을 맞이했다. 함께 일한 동지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의장께서 위험을 넘어 죽음을 불러오는 단계 하청업체 구조를 끊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었다.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 이행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애도의 뜻을 표한다. 국회의 소임은 무엇보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일임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특히 국회가 법과 제도로서 그 역할을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스럽다"며 "7년 전 김용균 청년 노동자의 사망사고 당시, 저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및 당시 원내대표로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중단하기 위해 태안에 온적이 있다. 이후 대책위의 합의 및 특조위 구성 등으로 사항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구체화했다"며 "다만 현재 새정부가 구성되는 단계이므로 논의 구조를 갖추고 진상조사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8일 태안,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기계공작실) 현장답사 모습

분향소 내 간담회 이후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기계공작실)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사망 사고가 난 작업대에서 사측과 노동부 대전청장은 “무슨 작업을 하다가 사망했는지 모른다”, “비교적 안전한 작업이었다”, “1인이 할 수 있는 정밀작업이었다” 라는 등 사고 경위조차 제대로 보고하지 못했다.

관련하여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입장을 통해 "선반작업은 고용노동부가 위험한 작업으로 분류한 대표적인 작업이다. 고 김충현 씨 사고는 위험을 하청과 노동자에게 전가하면서 발생한 사고였다"라며 "서부발전의 1차 하청회사인 한전KPS는 서부발전의 공장을 임대했고, 서부발전의 선반기계를 사용관리하였으며, 2차 하청 노동자인 고 김충현이 사용하다 사고가 났다. 이 사고의 책임이 서부발전이 아니면 어디 갔는가? 그럼에도 이번사고를 '예외'나 '개인 실수'로 치부하는 정부와 기업의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고 고인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질타하며 위험업무 2인 1조 시행을 방치한 정부와 정치권을 질타했다. 이어서 "국회와 정부는 실천하고 책임져라. 제도와 법으로 증명하라"면서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생존권이며, 이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 말했다. 그 말이 정치적 수사가 아닌, 구체적인 법과 구조의 변화로 이어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관련하여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요구안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노조·유족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원·하청(서부발전,한전KPS,한국파워O&M)의 사과와 유족 배·보상) ▲**6년전 약속, 이제는 이행하라** (한전KPS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김용균 특조위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권고 이행/노동안전을 위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분야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현장 인력 확충 및 안전 대책** (위험업무 2인 1조/관리 감독 사각지대 해소/발전소 폐쇄를 핑계로 채우지 않고 있는 인력 충원/발전소 전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발전소 폐쇄 관련 대책 마련** (발전소 폐쇄 관련 모든 노동자 충고용 보장/공공재생에너지 확대) ▲ **발전소 폐쇄 관련 대책 마련** (발전소 폐쇄 관련 모든 노동자 충고용 보장/공공재생에너지 확대)을 요구하고 있다.



6월 6일 서울역,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주최 "이재명 대통령,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남시다-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추모문화제" 모습

